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2면
1965년
한일협정 3면

노동시간
개악안
16면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14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8~9면

중국의 이란-사우디아라비아
합의 중재 4, 5면
중국 양회 15면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합의 7면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10~12면
그리스 파업 13면



윤석열이 지원하는

미·일 제국주의 반대해야 한다

관련 기사 2, 3, 6, 7면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뤘 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윤석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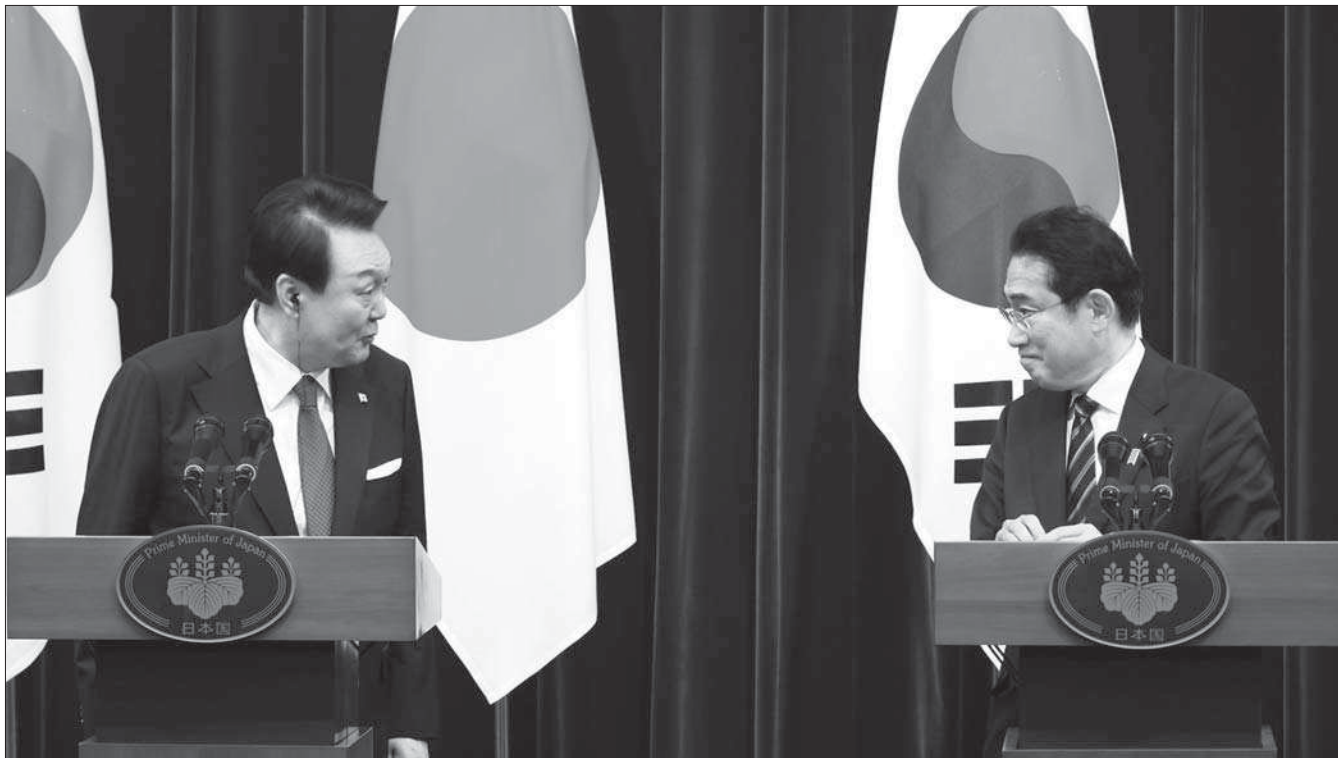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습니다.”(기시다)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기반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의 배상 책임(그나마도 피해자 1인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을 거부하고 면죄부를 내준 자들이 자유, 인권, 법치를 운운하니 역겹기 그지없다.

한편, 이번 회담의 결과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3종에 관한 대한민국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WTO 제소를 철회했다. 수출 우대국 조치,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의 원상 복구도 논의해 나아가기로 했다.

일본 방문에 동행한 5대 재벌 총수(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롯데 신동빈) 등 기업인들도 일본의 기업인 단체(계이단렌)와 회담을 가지며 양국 교류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며 축배를 들었다.

윤석열이 서방 제국주의 진영에 힘을 실어 주면서 강대국 간 각축전에 한 플레이어로 뛰어들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과 손잡고 벌이려는 그 어떠한 일도 진정한 의미의 ‘안전 보장’이나 평화와 관계가 없다.



“압도적 전쟁 준비”를 하자는 윤석열과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시다의 위험한 만남 3월 16일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군사 협력 강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중국을 견제·포위하려는 미국을 편들며 결속을 다지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최근 주미 대사 조태용은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에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이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솔직히 토로했다.

윤석열과 기시다가 말한 “보편적 가치,” “자유롭고 열린 질서”라는 말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즐겨 사용하는 위선적인 용어이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앞세워 왔다.

기시다는 이번 회담에서 “현재의 전략 환경,” 즉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는 시급[하다]”고 말하며, 일본이 의장국인 5월 히로시마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의는 G7 국가들이 더 견고한 대중국 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바이든은 이러한 흐름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그는 3월 29~30일 열린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중국 ‘권위주의’에 맞서자며 미국이 동맹국을 모아낸 회의)에서 윤석열에게 ‘반부패’에 관한 세션을 주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4월 말에는 윤석열을 12년 만에

국민 자격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 중에는 최근 부쩍 심화한 북한 핵 문제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 당일 오전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한일 정상회담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과 기시다는 북한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은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미사일을 핑계로 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 강화는 주지하듯이 북한 너머 중국까지 겨냥한다.

최근 일본이 보유하겠다고 공언한 ‘반격 능력’도 북한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윤석열은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이를 지지한다고 일본 언론들에 밝혔다.

전쟁 불안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단이 윤석열에게 이번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의 실체가 뭐냐고 물었다. 윤석열은 이렇게 답했다.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다.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력 강화, 강대국과의 동맹이 모든 국민에게 이익(“국익”)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전쟁을 결정하고 그런 도박이 성공하면 얻을 것이 있는 쪽은 국가와 기업의 지배자들이다. 반면, 전쟁에서 총알받이가 되고 가족을 잃는 등 희생양이 되는 것은 대부분 노동자 등 서민층이다.

윤석열이 서방 제국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 주면서 제국주의적 각축전에 한 플레이어로 뛰어들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과 손잡고 벌이는 그 어떠한 일도 진정한 의미의 ‘안전 보장’이나 평화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한반도 주변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 뿐이다.

이미 한일 양국의 지배자들은 저마다의 노골적인 호전적 정책(기시다의 군비 5년 내 2배 증액,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론 등)으로 자국민 다수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규탄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특히 윤석열의 서방 제국주의 지원 행보에 대한 반대와 연결돼야 한다.

김승주

1965년 한일협정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2012년, 2018년)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자신도 얼마 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모순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 1965년 한일협정이 있는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는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일본한테서 제공받는 대가로 강제동원 등 일제의 식민 지배 피해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해 줬다. 일본 국가의 배상은 물론 어떠한 사죄 문구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돈을 준 일본도, 돈을 받은 박정희 정부도 그 돈을 피해자들의 청구권 몫으로 여기지 않았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받은 돈에서 피해자 지원에 쓰인 돈은 무상 지원금 3억 달러 중 5.4퍼센트에 불과했다.

이 협정의 진정한 성격은 냉전 시기 동북아시아에서 반소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의 일환이었다. 당시 한일협정 체결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은 미국한테서 나왔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냉전 전략을 실행하는 데서 일본은 핵심 파트너였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은 총부리를 겨누는 사이였지만, 소련과의 냉전적 대립이 뚜렷해지자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핵심 파트너로 삼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천황제를 비롯한 구질서와 기존 권력자들의 권력을 유지시켰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대일강화조약)으로 미국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 책임에 면



한일협정은 미국 제국주의의 동맹 구조 강화에 기여했다. 1965년 한일협정 조인식

죄부를 주고, 같은 해 미일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저지른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집단안보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에게 동맹국들이자 대소련 전초기지인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1964년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한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부담이 가중되자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은 전후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던 일본이 한국을 지원해 안보 비용을 분담하고, 대신 한국이 일본의 파트너 구실을 해 주길 바란 것이다.

삼각 협력

미국의 이런 이해관계는 당시 일본과 한국 지배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다.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가 필요했던 일본 자본주의에도 한국과의 국교 수립은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대소련 전초기지인 한국의 대일 우호 정부의 안착과 경제 성장은 일본의 안보와도 연결된 문제였다.

한편, 자본축적을 위한 자금이 절실했던 박정희에게 일본의 원조는 매우 필요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게 경제 성장은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서도 중요했다.

이렇게 체결된 1965년 한일협정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한미일 협력 구조가 오늘날 다시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따금 갈등하기도 하지만, 갈등은 삼각 협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로 봉합돼 왔다.

이런 한미일 협력 관계 속에서 이득을 취해 온 한국 지배계급은 그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 애써 왔다. 반대로, 강제동원, 위안부 등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완전히 무시됐다. 이 문제에서 한미일 3국 지배자들은 공범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저 굴종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응한 게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윤석열의 제3자 변제 '해법'도 바로 이런 노선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이 노선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컨대 반일 민족주의를 정치적 위기 탈출용으로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도 정작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강제집행은 중단시켰다.

노동자·민중 쥐어짜기

우파는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그리고 미국)과 긴밀해졌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제공한 자금과 기술 지원은 한국 자본주의가 자본축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포스코 등 철강 산업과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의 성장도 일본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다. 철도, 지하철, 통신, 송전시설, 댐 등 기간 시설을 짓는 데서도 일본의 자금이 많이 쓰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자본가 계급과 국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노동자들을 비롯해 한국 서민층은 미국·일본이 후원한 독재정권하에서 쥐어짜이고 짓눌려 살아야 했다.

한일협정이 발판을 마련한 한미일 협력 구조는 일본 제국주의 부흥의 발판이 돼 지금 아시아 긴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강제동원 합의는 민족적 굴욕 문제가 아니라 미일 제국주의, 그리고 이에 협력하는 한국 지배계급의 문제이다.

이현주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wspaper.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명일정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엔크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인명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1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란-사우디 중재로 드러난 중동에서의
중국 부상

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금요일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영국방송공사 BBC가 매우 우익적인 영국 보수당 정부에 굴복해 인기 스포츠 진행자 게리 리네커의 출연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보아 심중팔구 더 중요한 뉴스는, 같은 날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정상화 합의를 자신이 중재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일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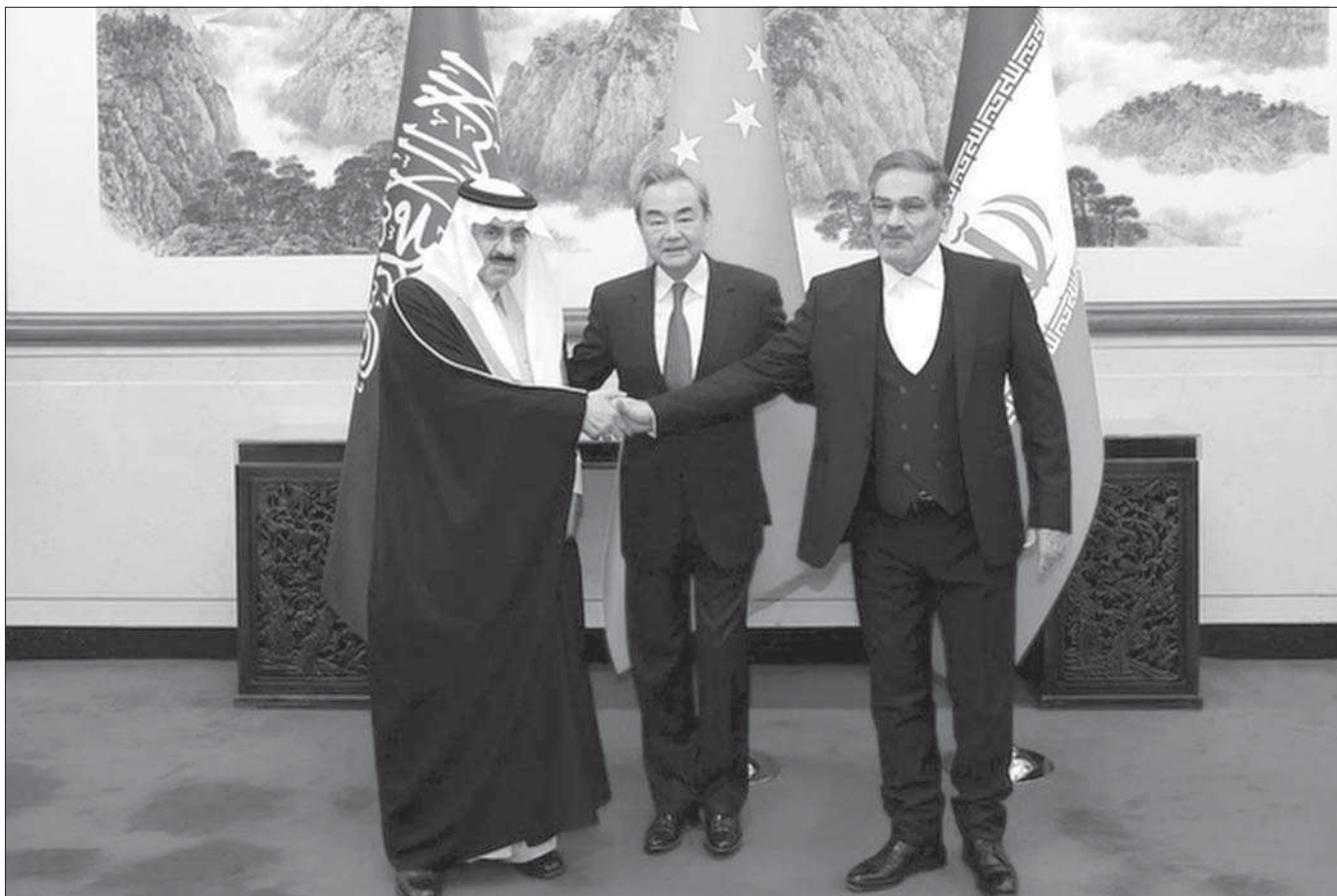
이 합의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합의라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패배하자 — 다음 주면[3월 20일, 월요일 — 역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정확히 20년이 된다 — 역내 아류제국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패배가 남긴 공백을 메우려고 쟁투를 벌였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가 그런 쟁투를 벌인 주요 강국들이었고, 이스라엘도 일정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가장 주된 대립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 사우디 왕가 사이에 벌어졌다.

아류제국주의

둘은 시리아와 예멘에서 대리전을 벌여 왔다. 이란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한 덕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만 연안의 왕정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움직임을 적극 밀어 줬다. 그 결과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돼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바레인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다.

싱크탱크인 카네기재단의 카림 사자드푸어는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이제 와서 왜 기꺼이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이란 정부는 여기서 무엇을 얻는가? 이란은 심하게 고립돼 있고, 몇 달 동안 시위로 곤욕을 치렀으며, 중국에 전략적·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고립을 완화시키고, 통치 정당성을 확보해 주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만큼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무엇을 얻는가? 2019년 아랍코[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정유 시설의 피습을 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란의



미국이 오랫동안 지배력을 행사한 중동에서 중국이 주요 전략적 행위자로 등장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이 이란에 행사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중동 상황의 안정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를 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협정을 통해 중국이 이란의 공격을 막아 줄 방패가 돼 줄 거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합의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요소는 중국이 중재자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회담을 주재한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이렇게 꼬집었다. “세계에는 우크라이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 정부 내 일부는 이번 합의에 중국

정부가 관여한 것에 경각심을 드러냈지만, 바이든 정부가 그런 중재자 구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었을지는 분명치 않다. 트럼프가 일방으로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고 이란의 최고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뒤로, 이란 정부와 미국 정부는 대화를 거의 일절 거부해 왔다.”

1978~1979년 이란 혁명 이래 미국은 페르시아만 연안 지역에서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군사력을 거듭 동원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동에서 수출되는 석유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중동 석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크게 줄었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란의 주요 경쟁국이다.

한편, 중국은 페르시아만 연안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 됐고,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제조업 상품 최대 수출국이 됐다. 이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다.

미국과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관계도 계속 악화돼 왔다. 〈워싱턴 포스트〉

를 다시 인용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더 넓은 페르시아만 연안의 미국의 아랍계 동맹 세력들은 자국의 인권 탄압, 정치적 부자유, 선거 부재를 미국이 문제 삼는 것에 섭섭해할 때가 많다. 반면 중국 정부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지난 1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고, 지난달에는 이란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시아와 함께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따라 러시아를 고립시키기를 거부했다.

미국은 중동 전역에 여전히 대규모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그 지역에서 4만~6만 명에 이르는 병력과 30개에 가까운 주요 기지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크리스틴 스미스 디완은 이렇게 지적했다. “중국은 페르시아만 연안의 명실상부한 전략적 행위자로 등극했다.”

번역 이원웅

출처 Alex Callinicos, “Why China brokers an Iran-Saudi deal”(2023. 3. 13)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으로 바이든을 한 방 먹인 시진핑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시진핑은 이번 양회 동안 두 가지 행운을 얻었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3기가 지배계급 내 이탈표 없이 만장일치 속에 출범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가 포함된 47명을 테러 혐의로 처형한 뒤로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관계가 단절됐었다.

시진핑은 사우디-이란의 관계 복원 중재로 많은 것을 얻을 듯하다.

무엇보다, 미국·유럽의 거센 대중국 압박 속에서 시진핑은 중동에서 우군을 확보했다. 2022년 6월 나토는 12년 만에 전략 개념을 바꿔 러시아를 편든 중국의 위협을 '구조적 도전'으로 표현했고, 바이든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런 압박에 맞서 중국은 최근 미국-사우디 관계가 불편해진 틈을 이용해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제국주의 질서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

사우디와 이란이 중동 국가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부차적 행위자 구실을 해 왔다. 그런데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복원에 개입하며 중동 세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 것이다.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복원에 중국이 개입한 사건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중동의 권위주의 정권은 인권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서도 원유를 대량 구매하는 중국을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 상대적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우디가 역내 패권을 추구할 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로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하고 있듯이, 중국도 중동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를 자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이 사우디로부터 또 한 번 뺨을 맞은 외교



이번 합의의 사전 작업이었을 지난해 시진핑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중 열린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에는 다수의 친미 국가가 참가했다

적 실패를 경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여름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가 중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관계 복원으로 시진핑이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지지부진하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2013년 시진핑이 야심차게 내놓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동남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는 최근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다. 중국은 스리랑카에 약탈적 차관(일명 부채 외교)을 제공해 항구를 건설한 다음, 채무 상환을 이유로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자신의 영토처럼 차지했다. 1840년 아편전쟁 패배로 홍콩과 마카오를 잃은 설움을 스리랑카에서 그대로 보여 주는 듯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혁명적 운동이 일어나, 중국 차관을 끌어들이 부패 정치인이 물러났다. 그러자 함반토타 항구의 미래가 초미의 쟁점이 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구다.

시진핑은 추진력에 제동이 걸린 일대일로 정책에 전기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全球安全倡議)

라는 또 다른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역 안보 이슈, 국지적 충돌, 일방주의, 보호주의 등이 만연해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에서 국제 평화 안보 수호를 위해 이 '이니셔티브'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와 미국의 일방주의·보호주의가 지역 분쟁과 충돌을 야기하므로 중국이 분쟁들에 개입해 '중국 주도의 세계평화'(팍스 시니카)를 정착시키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시진핑은 이번 양회에서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복원 중재를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첫 사례로 알렸다.

또한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개입해 조만간 푸틴·젤렌스키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랑 외교”

중국의 이런 행보가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헤게모니를 구축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달리 타국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특히 군사 개입보다는 내정 불간섭과 경제 교류 활성화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 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한 강압에 의존한다면 중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중국의 “늑대전사(전랑

戰狼) 외교”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중국도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도 활용하는 공세적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2013년 총서기직에 오르자 이렇게 밝혔다. “중국은 결코 자국의 핵심 이익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을 상실하는 것을 결코 참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때 중국의 핵심 이익은 국내적으로는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와 특히 대만을 뜻하며, 국제적으로는 해외의 중국 해군기지와 아프리카·중동·남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이익이 포함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인민해방군의 구실도 국내 통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인민해방군이 밝힌 <강군전략>은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근해를 통제하고 양양(兩洋, 태평양과 인도양)에 들어가며 서태평양과 북부·중부 인도양 해역에서 유효하게 국가 이익을 보호한다.”

사우디·이란 관계 개선과 중국의 중재로 한 방 먹은 바이든은 중국을 상대로 또 다른 공세를 준비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치고 받기는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고 세계 질서는 이 제국주의적 경쟁과 갈등으로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고 하는 말이다.

북한도 전략순항미사일 등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오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일본 앞바다로 발사했다.

이처럼 미·중 갈등 격화를 배경으로 연합훈련과 미사일 발사가 교차하며 한반도에 긴장이 쌓여 가고 있다.

체스판

지금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강대국은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저마다 적극적인 수를 주고받는 양상이다. 한반도는 그 체스판의 일부다.

3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중국의 중재로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주름잡아 온 중동에서 주요 행위자로 올라섰음을 과시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바이든 행정부에 경종을 울린 일"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시진핑은 이르면 다음 주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과 전략적 협력 증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푸틴과 젤렌스키 간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관여하려 한다.

미국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한일 관계 진전은 미국이 최근에 거둔 그들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다. 바이든 정부는 전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꼽아 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아시아 담당 부소장인 빅터 차는 강제동원 한일 합의가 한미일 3자 간의 제 추진에 속도를 낼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사 문제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제도화, 한미연합사와



윤석열 정부의 서방 제국주의 편들기는 한국이 냉전전의 최전선이 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일본 방위성 간 연락장교 파견, 한미일 '확장억제'(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체계 등 모든 전력을 동원해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개념) 공동 협의체, 대만해협 유사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의 제언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3일 미국, 영국, 호주의 오키스(AUKUS)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최대 5척을 팔기로 하는 등 군사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할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 윤석열은 거기에 주된 행위자로 포함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전구급

올봄 한미연합훈련은 미·중의 이런 각축전이 한반도라는 지역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실기동 훈련을 '전구급'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공세적인 의미가 있다. "전구급이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휘소 훈련은 물론이고 실기동 훈련도 세계 최대 규모 훈련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정육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달 말에는 미군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한국에 와서 한국군과 훈련을 벌인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도 참가하는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까지 실시한다. 한미 군사훈련이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이어지며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훈련도 1만 3000여 명을 동원해 대규모로 진행한다. 한국군은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훈련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쌍룡훈련에는 영국 코만도 부대도 참가한다. 오키스의 일원인 영국의 한미연합훈련 참가는 영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군사적 역할을 늘려온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당연히,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월 12일 동해에서 북한은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까지 기습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이다. 14일 북한은 황해남도 장연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곳은 남한 백령도에서 지척이고 서울과도 멀지 않은 곳이다.

16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는 미국의 후원 속에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주로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맞대응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얼마 전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시진핑의 국가주석 3연임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내어 북한과 중국의 관계 증진을 약속했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한미일의 압박에 대처하는 것이다.

F-35A

《2022 국방백서》를 보면, 지난해 한미 군 당국들은 국내외에서 연합훈련을 총 256회나 벌였다. 365일 중 훈련을 벌이지 않은 날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연합훈련이 벌써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이에 더해 13일 윤석열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 F-35A 20여 대를 추가 도입하고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서 구입하는 동시에,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하며, 군비 증강에 매진하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 불안정화에 일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우파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이런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강할 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북한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국방비에 쓰며, 3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도 주둔해 있다. 이것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는데, 여기서 군국주의와 친서방 외교를 더 강화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 강' 대결 양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여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지배계급 자체의 이해관계를 나름대로 대변하며, 갈수록 분열해 가는 국제 질서 안에서 서방 제국주의와의 협력을 더 늘려서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인해 한국이 냉전전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영익



전쟁 위험을 키우는 오커스(AUKUS) 동맹

사진 출처: Number 10 (블러카)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합의 — 중국 견제 위한 태평양의 군사화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세계 곳곳에서 첨예해지고 있다.

3월 6일 강제동원 한일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관련 기사 본지 451호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3월 10일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복원 합의를 자신이 중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중동에서 주요 전략적 행위자로 등장했음을 알린 사건이었다.(관련 기사 '알렉스 캘리니코프 논평: 중국의 이란-사우디아라비아 합의 중재는 중동에서 중국의 부상을 뜻한다')

3월 13일 대(對)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동맹에 속한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3국 정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 직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을 203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에 판매할 것이고, 필요시 2척을 추가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현재 미국의 최신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으로, 미국이 핵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65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공급 계획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10년은 빠른 일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미군 고위 장성 일부는 수십 년

이 아니라 수년 내에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1월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의 4성 장군인 마이클 미니헌은 미국과 중국이 2025년에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당장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영국의 핵잠수함 기지 역할을 할 듯하다. 미국과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퍼스에 잠수함을 각각 최대 4척(미국), 1척(영국)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오커스 합의는 한국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망도 자극했다.

〈조선일보〉는 3월 15일 자 사설에서 한국도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물속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젤엔진의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잠수함은 연료 재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탐지를 피해 수중에 오래 머무르면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다.

“게임 체인저”

바이든은 이번 오커스 합의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꾸밈지만, 실은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의 군사화를 강화하는 조처다.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해양 작전을 펼칠 능력과 지역적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력이 강해지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에 대한 억지력과 더불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됐다.”(〈가디언〉 3월 13일 자)

이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 “역사상 최대로 국방력에 투자”했다(총리 앤서니 앨버니지가 한 말).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남중국해·동중국해 등으로 진출해 미군과 연합 작전에 나설 수 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의 목표가 인도-태평양의 판세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협력해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영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위반했다”며 당연히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본·필리핀·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군사 협력을 늘릴 계획을 뜻하는 것이었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지지했다.

바이든의 이런 구상은 이번 합의를 발표한 장소에도 반영됐다. 샌디에이고는 미국 서해안의 최대 군사 기지이자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다.

오커스 정상회담에 참석한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중국에 대해] … 우리의 영토를 수호할 태세가 돼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계속 주도하려는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특수부대 코만도 1개 중대가 사상 최초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참여한 것은 불길한 징조다.(관련 기사 본지 452호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기존 세계 질서를 계속 주도하기 위해 유럽에서 나토(NATO)를 확대했다.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를 자극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인이 됐다.

인도-태평양에서는 오커스가 군사 동맹의 주요 축이다. 오커스의 목적은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 인도-태평양을 군사화하는 것이다. 오커스는 2021년 9월 결성됐는데, 참가국들의 의회에서조차 공식적으로 토론된 적이 없었다.

군비 지출 증가, 위험한 신형 무기 제공 등은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며 군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일본이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고, 윤석열 정부가 서방 제국주의 편을 드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김인식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갑작스러운 파산은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SVB는 자금 조달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돈 지 불과 36시간 만에 예금 56조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했다. 이후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한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하는 등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 미국 정부는 긴급하게 파산한 은행들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은행 주가가 떨어지며 세계적으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위기는 세계 9위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로 확산됐다. 크레디스위스의 자산 규모는 2008년 파산한 리먼브라더스의 두 배에 달한다. 파산을 막기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이 70조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과연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처럼 금융 위기의 방아쇠 구실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자국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전까지도 각국 정부들은 비슷한 말을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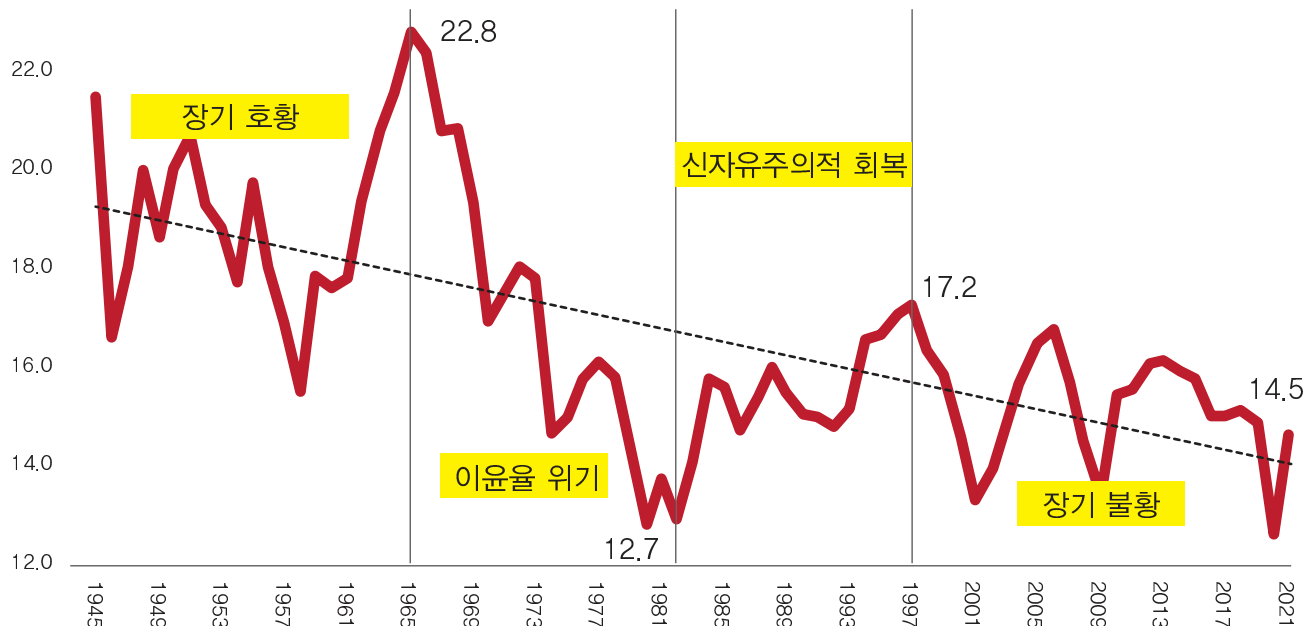
물론 SVB 파산은 리먼브라더스 파산과는 차이가 있다. 200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주택담보대출과 그에 기반을 둔 파생금융상품들이 부실해지며 금융 위기가 촉발됐다.

이와 달리 SVB 파산은 IT 벤처기업 거품이 꺼진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IT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크게 성장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뿐 아니라 각국의 저금리 정책 덕분에 투자금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IT 벤처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SVB도 지난 몇 년간 급성장했다. SVB의 자산 규모는 2020년 말 1155억 달러(약 150조 원)에서 2021년 말 2115억 달러(약 275조 원)로 거의 2배로 불어났다. SVB는 이렇게 늘어난 자금을 안전자산

미국 비금융부문 기업 이윤율(퍼센트)

출처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대량 투자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경제가 침체하고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자 IT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이 기업들은 SVB에서 예금을 인출해 가기 시작했다. SVB는 예금 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팔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며 큰 손실을 봤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며 뱅크런이 벌어진 것이다.

구체적인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리먼브라더스와 SVB 파산은 근본에서 같은 원인 때문에 벌어졌다.

기업들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로 부풀어 있던 자산 가격이 꺼지자 취약한 부문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영국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가 마이클 로버츠의 분석을 보면, 미국의 비금융 기업 이윤율은 2008년 전에 견줘 더 떨어졌다. 2008년 위기를 낳은 낮은 수익성이라는 문제는 지난 15년간 오히려 더 심화된 것이다.(위 그래프)

각국 정부들은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려 했다. 이 돈 중 일부는 IT 벤처기업에 '과잉 투자' 됐고, 더 큰 돈은 주식·부동산 시장 등에 흘러들어 자산 거품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부채도 크게 치솟았다. 세계 총부채는 2008년 이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200퍼센트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GDP의 345퍼센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각국 정부들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 인상에 나서자 기업들의 부실이 증대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꺼지며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관련 기업들이 파산한 데 이어 최근에는 IT 벤처기업 관련 은행이 위기를 맞고 있다. 크레디스위스의 위기는 이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기업주들을 위한 막대한 지원

미국 정부는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기업주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고액 예금도 전액 보증하고, 연준이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지원할 때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가치를 액면가대로 인정해 주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재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재원을 활용해 예금주들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2008년 구제금융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2008년에 기업주와 은행들을 살리려고 정부가 막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큰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SVB의 예금주 대부분은 IT

벤처 기업주들이다. 바이든 정부가 신속하게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고 나선 것은 IT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SVB의 자산을 판매해서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지만, SVB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므로 결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위기에 처한 IT 기업들과 은행들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며 수익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 등을 막을 조처는 전혀 내놓지 않았다. 결국 2008년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살리는 데는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하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큰 고통이 전가되는 것이다.

2008년 위기 속에서도 은행가들과 기업주들은 큰 보너스를 챙긴 반면, 미국에서만 900만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고, 일자리 수천만 개가 사라졌다. 이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

지금도 SVB의 CEO 그레그 베커는 파산 직전에 주식 47억 원어치를 매각하며 돈을 챙겼다.

2008년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등 서민이 아니라 기업주와 은행가들이 지게 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정선영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후폭풍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강동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바 있다.

금융권은 SVB 사태가 국내에 직접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추경호도 3월 14일에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SVB와 관련된 투자도 거의 없고 상태도 양호하다며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SVB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어 그 후폭풍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SVB 파산 직후 유럽의 주요 은행인 크레디스위스가 파산 위험에 처한 것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 줬다.

미국 정부가 급히 SVB 예금 전액 보장 대책을 내놓은 것이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지방은행들의 추가 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SVB는 벤처기업들에서 예금을 끌어모으고 이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큰 손해를 봤다. 고위험 벤처기업과 미국 국채 투자에 기반을 둔 SVB의 사례는 국내 금융기업들

의 상황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

제2금융권

미국 SVB 파산의 충격은 한국에서 제2금융권(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드러난 제2금융권의 부실 위험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국내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기업에 대거 대출했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3월 9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PF 대출잔액은 은행권이 30조 8000억 원, 비은행권이 85조 8000억 원이다. 증권사(27조 4000억 원)와 보험사(44조 6000억 원)처럼 은행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제2금융권의 PF 대출이 상당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위기가 계속된 지난해에도 증가해 저축은행 상위 10곳의 PF 대출이 4조 5357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제2금융권 PF 대출의 위험도는 은행보다 더 크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고위험 PF 대출 비중은 은행이 7.9퍼센트인데 반해, 보험사 17.4퍼센트, 증권사 24.2퍼센트, 저축은행 29.4퍼센트로 추산됐다.



치솟는 금리와 경기 침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 침체 심화는 제2금융권에서 회수되는 자금도 늘리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금리가 급등하며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자, 저축성보험 해지가 늘어나며 생명보험사들의 자금 상황을 악화시켰다.

생보협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보험 해약환급금은 38조 5299억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4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보험 계약액은 23조 2284억 원에 그쳐, 보험사들에서 십수조 원이 빠져나갔다.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도 경기 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금리도 치솟아 이 기업들

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에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1월 경상수지·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의 경기 침체도 타격을 주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을 높일 다른 방법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 개악을 추진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 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경기 침체와 기업 부채 위기가 심화될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고물가·고금리로 벌어진 생계비 위기에 맞서 실질임금을 방어하기 위한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자고?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은 3월 13일자 사설에서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1.25퍼센트포인트”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환율이 폭등”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위기

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말이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금융·외환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단지 환율을 방어하려고 금리를 올린 것만은 아니다. 한국은행도 다른 중앙은행들처럼 ‘임금-물가 악순환’을 우려하며, 경기를 침체시켜서라도 실업률을 높여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을 지키려 투쟁하는 것

을 막으려고 해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은 고금리·고물가로 이미 심각한 생계비 위기를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금리를 올리자고 요구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일인 것도 아니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금리 인하로 외화 유출이 벌어지면 정부가 나서 자본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물론 기업과 부유층은 이런 자본 통제에 반발하며 여러 방안들(수출대금의 해외 보유, 대량 해고와 기업 폐쇄 등)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자본 통제에 나서도록 만들고 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을 제압하려면 심증팔구 더 큰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이 투쟁을 근본적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의 일부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대안이다.

프랑스

연금 개악에 맞서 역사적인 저항이 벌어지다

거대한 운동의 향방을 결정짓기 위한 싸움

찰리 김버

프랑스 노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운동에 어떻게 발동을 걸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파업을 확대하고 파업의 향방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확실하게 패배시킨다면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시위 규모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이다. 위대한 1968년 항쟁 이래로 분명 최대다.

아직 사회적 위기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파업과 점거가 훨씬 더 제한적이지만, 거리 시위의 규모는 혁명적 상황이었던 1936년의 시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T)은 6차 전국 행동의 날인 3월 7일에 파리에서 행진한 70만 명을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약 350만 명이 행진했다고 밝혔다.

마르세유에서는 약 25만 명이 행진했고 툴루즈에서는 12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보르도에서는 1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정부의 공식 집계로도 전국의 시위 참가자가 수는 '겨우' 128만 명에 달해 신기록을 경신했다.

모든 시위에서 분노와 투지가 가득했다. 그저 상징적인 집회나 안전한 걷기 대회같은 행진이 아니었다. 파리 시위에 참가한 병원 기술자 알랭 브랑은 이렇게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크롱을 대통령궁에 들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선에서 파시스트 후보와 붙었고, 결선 투표를 앞둔 4주 동안 극우의 위협성과 '공화국 수호'에 관해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마크롱은 다시 기업주들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연금 개혁 반대 여론을 보여 줍니다. 수백만 명이 거듭해서 거리로 나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부자들이 떼돈을 번 것을 모두가 아는데도, 우리가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3월 7일 시위의 후속 행동으로서 3월



3월 7일 파리에서만 70만 명이 행진하다

11일 100만 명이 행진을 벌였다. 3월 15일에도 대규모 시위와 파업 일정이 추가로 잡혔다.

인기 없는

여론조사에서는 67퍼센트가 마크롱에 맞선 파업·휴업을 지지했다. 약 65퍼센트는 무기한 파업을 지지하고, 52퍼센트는 노란 조끼 운동과 같은 전 사회적 항의 운동을 바란다.

프랑스 국가는 원성이 자자한 조치를

강행하다 대중의 반대에 직면하자 권위주의적 강경 대응을 장려하고 승인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의 주변부를 최루가스와 곤봉으로 공격하고 체포했다. 프랑스-독일 국경 도시 스트라스부르 인근의 수문을 봉쇄해 라인강 상당 부분의 항행을 중단시킨 시위대도 폭력 진압했다. 중무장한 시위 진압 경찰이 파리 등의 도시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중등학교 학생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항도 있다. 3월 7일, 프랑스

학생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중등학교 300곳과 여러 대학교를 봉쇄했다. 마르세유의 시위대는 행진에 참가하려는 경찰노조 대열에 "발사체"를 쏘았다.

정부는 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것을 각오하고 대규모 시위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업에 대처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3월 7일의 행동은 사실상 총파업이었다. 거의 모든 철도 운행과 대부분의 파리 대중교통이 멈췄다. 노동조합들은 프랑스 교사의 60퍼센트가 파업했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들이 프랑스에 있는 모든 정유소의 정문을 봉쇄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대체인력 투입 저지 행동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봉쇄

파리의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신호탄이 울리기도 전에" 하루 일찍 파업을 시작해, 거리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항구 도시 르아브르의 공단을 봉쇄해 공장 가동을 멈췄다.

3월 8일 노동자들은 전날의 성공적



"빚 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하고 싶어요"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청년 학생들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이 중요하다

마크롱이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 결수 있는 최선의 희망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있다.

이들은 영국의 노조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좌파적 언사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승리에 필요한 무기한 전면 파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집중 행동의 날은 찌엄찌엄 잡히고 새 법안이라는 단일 쟁점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가장 전투적인 부위가 새로운 세력을 동참시키지 못한 채 지쳐 나가떨어질 수 있다.

투쟁 초기에 노동조합 연맹들의 단결은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 가장 크지만 보수적인 축에 드는 노동조합인 프랑스민주노동자총연맹(CFDT)의 지도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해 3월 7일 시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그 덕분에 시위 참가자 수가 늘었다.

그러나 이 단결이 CFDT 지도자 로랑 베르제가 원하는 것에 운동을 종속시키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장애물이 된다[베르제는 3월 7일 시위에 조합원 참가를 호소하면서, 이것이 무기한 파업이나 총파업 호소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베르제보다 더 전투적 언사를 말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베르제를 자신들의 실패를 덮을 핑계로 삼는다.

기층 조합원 네트워킹과 파업 위원회가 성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료들이 이들을 질식시키는가, 아니면 이들이 그 전에 파업의 주도권을 장악하는가를 두고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다.

기층 수준에서 결집한 노동자들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에 반대할 뿐 아니라, 연금 수령 연령을 더 낮추고, 임금을 올리고, 불안정한 노동 계약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 안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운동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르아브르에서 파업 노동자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파업 노동자 마르탱은 이

렇게 말했다. “3월 7일에 여러 부문과 공장에서 온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파업 노동자 총회가 열려, 지역 수준에서 시위와 파업을 연장하는 것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을 행동에 끌어 들여야 합니다. 투쟁에 흠뻑 뛰어들지 않은 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또, 이미 파업 중인 이들을 지원하려는 시도에 가능한 한 많이 동참해야 합니다.”

“3월 7일 시위에 4만 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오전 4시 30분부터 폐기물 수거 트럭 차고를 봉쇄하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아침 10시 반에는 투쟁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예비 심의에 소환되고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당하게 생긴 한 동지를 지원하러 갔습니다.”

투쟁 본부

“오후 6시엔 세계 여성의 날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르도 인근의 에네디스 배전망 노동자들은 “투쟁 본부”를 세웠다.

이 본부의 설립 취지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넘어선 행동에 관해 의논하고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전기가 끊긴 취약 계층과 요양원·병원에 대한 무료 전기 공급”을 조직하고 있기도 하다.

마크롱은 연금 개혁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그는 반란에 나선 노동자들과 불만족스러운 타협을 한 또 다른 대통령으로 [지배자들에게] 기억되지 않으려 한다.



사진 출처 CGT

프랑스 북부 포르모르 항의 입구를 봉쇄하며 파업 중인 항만 노동자들

인 시위와 세계 여성의 날을 기한 시위들에 고무돼 이른 아침부터 대규모 피켓 라인[대체인력 투입 저지선]을 치고, 회전교차로를 점거하고, 지역 수준에서 시위를 벌였다.

철도 등 대중교통, 정유, 폐기물 수거, 에너지 등의 부문에서 무기한 파업이 시작됐다. 출하를 앞둔 석유가 며칠 동안 정유소를 떠나지 못했다. 일주일에 걸쳐 프랑스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4곳 중 3곳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르몽드〉신문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파업으로 인해 3월 7일 발전량이 1만 5000 메가와트 감소했다. 핵반응로 15개의 발전량에 맞먹는 양이다. 다른 날들에도 파업으로 인해 발전량이 5000메가와트 감소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연금 개혁을 주관하는] 노동부장관 올리비에 뒤슈트의 [고향이자 뒤슈트가 2007년부터 15년 동안 시장을 지낸] 아노네시(市)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3월 9일에는 스타드 드 프랑스 축구경기장과 내년 7월 올림픽을 준비 중인 올림픽 선수촌 부지에 대한 전력 공급도 차단했다.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도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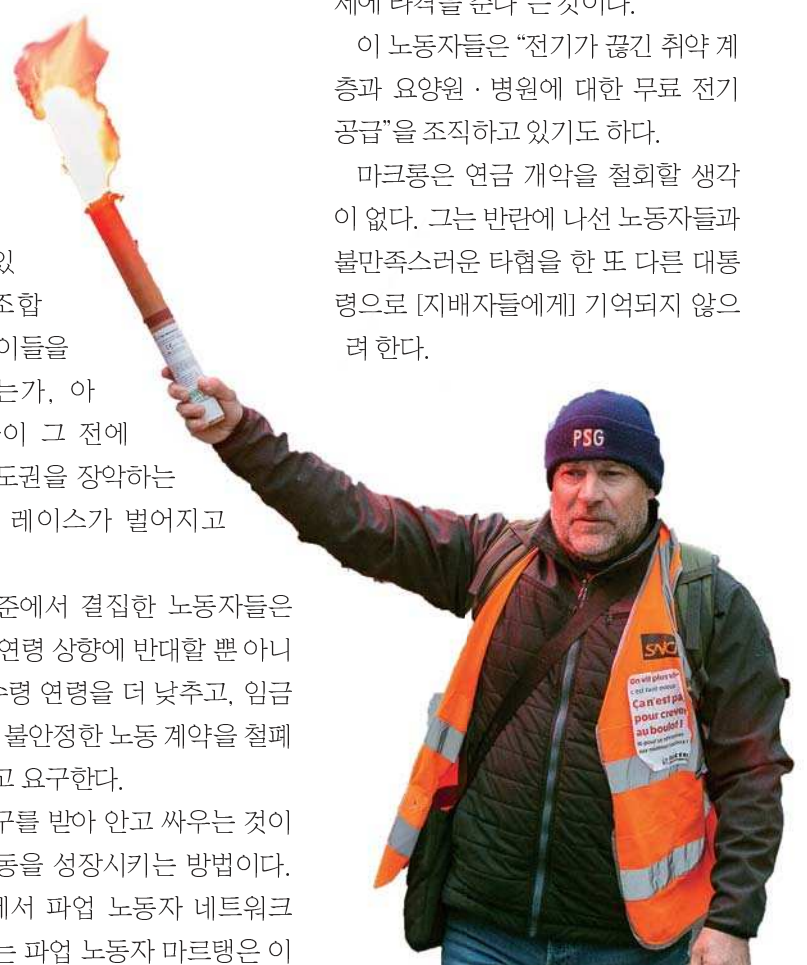
대중교통 부문에서 파업이 계속됐다. 파리 북부역, 르아브르, 툴루즈의 철도 노동자들과 파리 르부르제공항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더해 가스 부문도 3월 8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프랑스 최대 가스 저장고가 있는 구르네쉬르아롱드에서는 노동자 다섯 중 네 명 꼴로 일손을 놓았다. 몇 시간 후 가스 공급을 재개했다. 이곳 노동자이자 CGT 가스 부문 전국 대의원인 프레데리크 벤은 이것이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장기전을 벌이고 있고, 그에 따라 조직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주도성이 발휘되기도 했다. 루아르 지방의 금속 노동자들은 격일로 두 시간씩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속가공 공장 오베르뉴발의 노동자들은 지난주에 매일 2~3시간 파업을 벌였다. 프랑스 남부 아리에주에 있는 프렉세어의 화학 노동자들은 매일 수 시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파시스트를 약화시킨다

파업은 정치적 물음을 제기한다. 파업이 국민연합(RN) 파시스트에 대한 지지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 파업은 그 지지를 약화시킬 기회를 연다.

누군가가 말했듯 국민연합 지도자 마린 르펜은 투쟁이 시작된 이래 “잠수함이라도 탄 듯하다.” 이는 르펜이 거리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마크롱과 같은 편에 서고 싶지도 않지만, 결국은 기업주들을 섬기기 때문이다.

르펜은 당혹감 속에 침묵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합의 새 당대표 조르당 바르텔라는 “나라를 마비”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주유소 앞에 늘어선 끝없는 줄”에 관해 한탄한다.

파업 노동자들은 국민연합이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고, 분열이 적들에게 이로울 뿐임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 행진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여기에 도움이 된다.

인종차별 반대 단체 ‘연대의 행진’은 주요 시위들에 참가했다.

지난주 ‘연대의 행진’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우리는 이 정부와 정부의 논리 일체에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악과 프랑스 내무장관 다르마냉의 반(反)이민법, 무단 점유 금지법 [집이 없어서 빈집에 들어가 지내는 사



인종차별 반대 단체들도 3월 7일 연금 개악 반대 시위의 일부였다

람들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에 모두 반대합니다. 마크롱과 마크롱의 세상에 반대합니다! 연대, 자유, 평등, 모두를 위한 완전한 권리를 위하여!”

연금 개악 반대 파업과 세계 여성의 날 시위가 결합됨으로써 여성의 권리와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싸우는 것에 대한 훨씬 더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현재 의회 내 주요 좌파 세력은 장뤽 멜랑송이 주도하는 신(新)생태사회민주당(NUPES, 이하 뉘프)이다. 뉘프는 국회와 거리 모두에서 마크롱의 법안에 반대하는 행동을 지지했다.

그러나 멜랑송은 노동자가 아니라 “민중”이 결정적인 행위자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계급적 초점을 희석시키는 함

의가 있다. 특히 멜랑송은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의제

뉘프의 일부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충돌했다. LFI가 더 넓은 운동과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주류 노조 지도자들보다 더 전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혁명가들이 성장할 뚜렷한 기회가 있다. 이미 기층 노동자들의 회합에서 생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생산해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언론 보도는 연금 개악이 가져올 결과에 관한 노동자들의 절절한 성토로

연금 개악에 맞선 프랑스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저항 속에 인종차별 반대 단체, 여성 노동자들, 학생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요구가 모아지고 있다

가득하다.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 때문에 이미 50대에 관절염, 인대 파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지금도 연금 수령 연령까지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거리 시위와 파업은 의회를 넘어설 수 있다

마크롱 정부는 의회에서 연금 개악을 서둘러서 저항을 극복하려 한다. 개악을 일단 통과시키면 저항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행진하던 시점에, 프랑스 상원은 가장 파장이 큰 조항을 논의하고 있었다.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조항이다. 그날 저녁 상원은 이 조항을 201 대 115로 통과시켰다.

3월 12일 상원은 개악안 전체를 통과시켰다.

빠르면 3월 16일, 늦어도 3월 26일까지는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이다. 마크롱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 나머지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회가 정부 불신임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15일 오후 마크롱은 그 조항을 발동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 절차 때문에 투쟁을 끝내야 할 이유는 없다. 2006년 2월에 프랑스 정부는 최초고용계약법

(CPE)을 통과시켰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청년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내세우며 그 법을 도입했다.

그 법은 고용주가 아무런 사유 없이 26세 미만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하자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벌어졌다. 결국 입법 두 달만인 4월에 당시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은 CPE 시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소셜리스트 워커>는 이렇게 보도했다. “최초고용계약법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상징이 됐다. 이 법이 좌절됨으로써 프랑스 지배계급의 계획이 역풍을 맞았고 유럽 전역의 다른 지배층이 충격을 받았다.”

거리 시위와 파업으로 의회가 한 일을 뒤집을 수 있다.

번역 박이랑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지난달 28일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계기로 그리스에서는 잇달아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3월 16일(현지시간)에도 주요 노동조합 연맹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여 전국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리스의 혁명가 소티리스 콘토아니스가 이번 열차 사고로 이어진 철도 민영화의 역사를 살펴본다.

2017년 5월 13일 테살로니키-아테네 노선을 달리던 열차가 탈선해 한 주택에 충돌했다. 철도 기관사와 다른 세 명이 사망해 열차 잔해로부터 실려 나왔다. 승객 열 명이 부상했고 거주자 두 명이 아슬아슬하게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화를 면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그리스 철도 운영사 트렌OSE와 교통부는 손쉽게 원인을 찾아냈다. 과속, 즉 인적 과실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고는 본선에서 작업이 끝나지 않아 열차가 측선에서 달리던 중 발생했다. “작업이 완료됐고 아덴드로스에 역장이 있었다면 열차는 우회하지 않고 본선으로 계속 운행했을 것이다.”

“설사 기관사가 측선에서 열차를 계속 가속시켰더라도 안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역장이 상황을 알려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역장은 없었다. 관제사가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제사는 매표 업무도 해야 했다. 신호등이 경고를 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호등은… 작동하지 않았다.”

6년 후 지금, 역사가 되풀이됐다. [역사가 되풀이될 때는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무색하게도] 두 번째는 희극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비극으로 되풀이됐다. 다시 원인은 은폐됐다. 저들은 선로 전환기를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깜빡한 역장을 비난하거나 당시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의 동료들을 비난한다. 인적 과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값비싼 돈을 들인 자동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신호등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

안전 시스템의 핵심은 인간의 실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장에는 특별 “안전 막”이 있어서 손가락 하나가 넘어 와도 자동으로 기계를



철도 참사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주들에 있다

멈춘다. 이 특별 시스템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매우 경미한 오작동의 기미만 있어도 기계를 멈춘다.

그러나 그리스 철도에 도입된 “자동 시스템”의 핵심은 이를 설치한 도급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었다. 승객들과 승무원의 안전은 그다음이었다.

최초의 전기 신호 체계는 1980년대에 그리스철도공사(OSE) 노선에 도입됐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우파 일간지 <카티메리니>조차 인정했듯이 “2010년까지도 대부분의 철도망에서 원격 통제 신호 체계가 설치되고 운용되고 있었다.”

조악하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낡은 것일지언정, 이 신호 체계라도 남아 있었다면 템페에서 일어난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호 체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원격 신호 체계의 해체를 낳았다. 첫째는 민영화다. 그리스 최초의 철도는 19세기 후반에 도입됐다. 당시 철도는 무역과 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신속한 병력 수송이라는 군사적 목적에도 아주 중요했다.

100년 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그리스철도공사는 더 작은 회사들로 쪼개지기 시작했다. 2013년 옛 통합 그리스철도공사의 주요 자회사 트렌OSE는 정부가 민영화를 위해 설립한 그리스 자산개발기금으로 넘어갔다.

2017년 트렌OSE는 이탈리아국영

철도에 팔렸다. 새 회사의 목표는 수익성 좋은 아테네-테살로니키 노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다른 노선들은 대부분 방치하거나 폐쇄했다. 그리고 항공기와의 경쟁을 위해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는 새(중고) 열차들이 도입됐다.

수익성

기존 안전 시스템이 그러한 속도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회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시스템이 5년 동안 작동을 멈췄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될 게 뭐 있겠는가?

‘헬레닉 트레인’으로 이름을 바꾼 트렌OSE는 자사 웹사이트에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을 연상케 하는 철도 관제 센터를 찍은 사진을 띄워 놓았었다(지금은 내렸다). 기차표도 잘 팔렸다.

원격 신호 체계가 해체된 둘째 요인은 안전 시스템을 담당하고, 그 시스템을 고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도급 업체들의 추잡한 이해관계다. 안전 시스템 계약은 그 업체들에게 말 그대로 노다지였다.

자신의 안전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는 수십 년 동안 그 시스템의 유지 관리도 맡았다. 다른 업체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받았다. 이런 계약을 따낸 두 주요 국제적 기업이 있다. 캐나다의 봄바디어사와 프랑스의 알스톰사다. <카티메리니>

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두 기업은 그리스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들과 15건의 계약을 맺었고, 여기서 2억 5000만 유로[약 3500억 원]를 챙겼다.

업체들의 시스템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 오작동이 발생했지만, 그 시스템들은 기본적인 구실이라도 했다. 그러나 이나마도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 금융의 대가로 요구한 긴축을 이행하면서 방치되고 해체됐다.

그 후 옛 시스템을 재가동하거나 유럽의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그리스철도공사의 모든 노력은 도급 업체들의 미적거림으로 좌절됐다. 2014년 그리스의 건설사 AKTOR의 자회사인 TOMI와 알스톰이 설립한 합작 회사가 4100만 유로를 받고 “2년 안에” 옛 시스템을 복구해 주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그 계약에도 불구하고 알스톰은 남부 그리스에 설치된 봄바디어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를 거부했다.

이 프로젝트는 철도 시설 관리 업체인 ErgOSE가 그 합작회사에 1330만 유로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착수에 들어갔다. 9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신호등조차 없는 철도망이 대부분이다.

원격 신호 체계가 해체된 셋째 요인은 기업과 정부의 “유착”이다. 신민주당은 지배계급의 정당이자 기업들의 정당, 도급업자들의 정당이다.

대중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총리 미초타키스는 “인적 과실” 발언을 철회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옥에 간 사람은 역장뿐이다.

그리스 정부가 템페 참사 유족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점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전문가 위원회에 타나시스 켈리아스코풀로스를 임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트렌OSE의 최고경영자이자 대표였고, 현 그리스자산개발기금의 이사장이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그의 조사 위원 임명 소식에 논란이 일자 그는 사임해야 했다. 그리스철도공사와 ErgOSE 사장도 물러났다. 거짓 눈물 한두 방울과 겉치레 사과로 우리가 잊기를 기대한 것이라면 그들은 크게 착각한 것이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번역 김재현

출처 Sotiris Kampagianis, “A legacy of privatisation” (2023. 3. 8)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다음 날 <조선일보> 등도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한미일 군사 동맹(협력) 해체,” “주한미군 철수 투쟁”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항의 과정에서 사용된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졌을 때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보도했다.

검찰은 15일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관여했다는 활동가들을 구속 기소하며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공안 당국은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에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위기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이라며 문제 삼는 운동의 요구와 구호들은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킨 핵심 쟁점들과 관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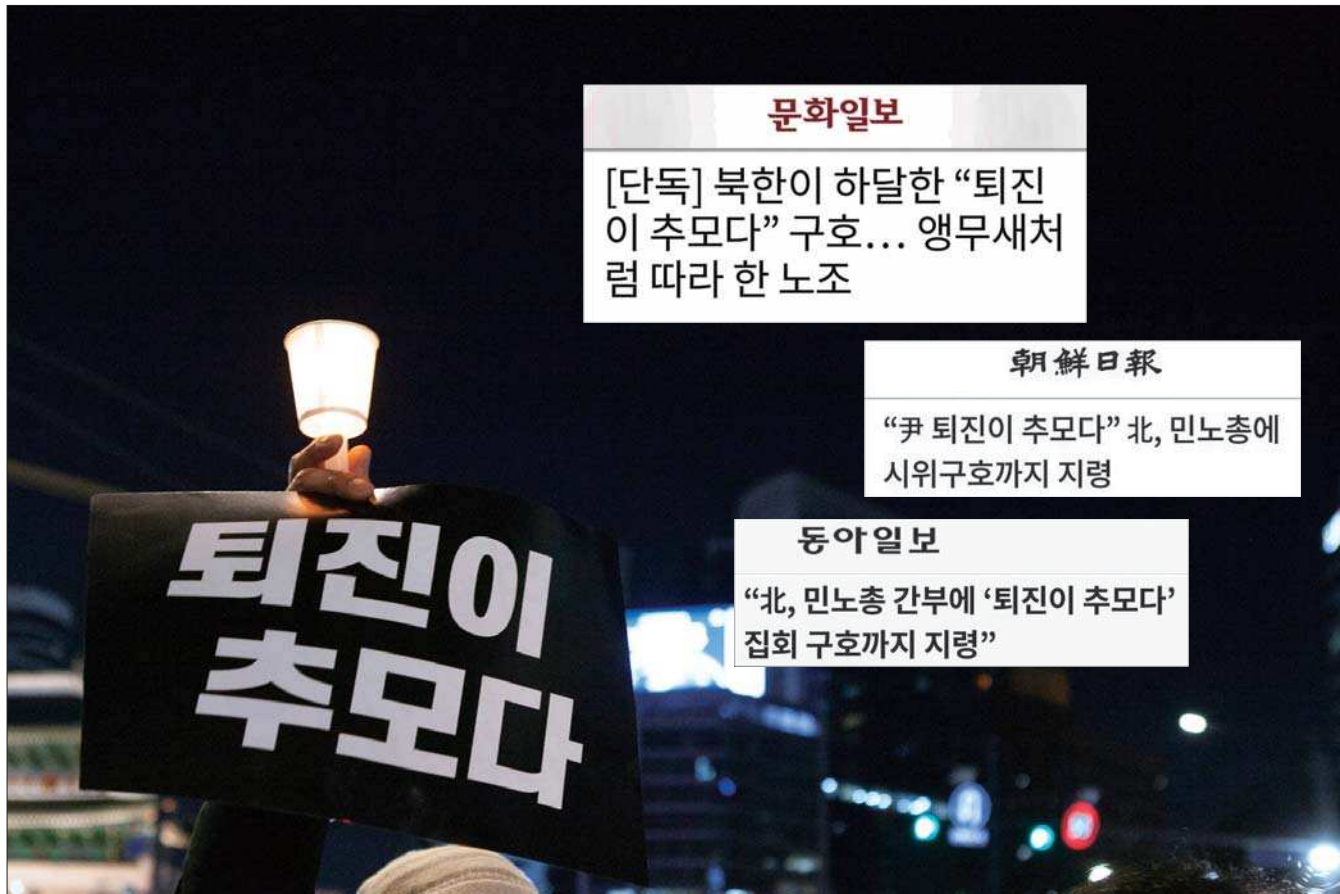
최근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는 대중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청년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무책임한 행보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사내하청 점거투쟁은 생계비 위기에 대한 불만을 대표해 윤석열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줬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수천에서 수만 명 사이 규모를 유지하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은 일각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번 북한 지령문 보도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반제국주의 평화운동, 반정부 운동, 노동운동을 분



대중의 심금을 울린 구호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과 우파 언론들은 그런 구호가 불편하다

열 · 위축시키려는 것임을 보여 준다.

만일 이런 운동들이 서로 고무하고 연결돼 반정부 정서가 전면화되면 윤석열 퇴진 요구가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윤석열은 이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퇴진 운동에 동참해 오지 않았는데도,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에 의해 나온 것처럼 당국이 몰아가는 것이다.

대중의 자주성

국정원 · 경찰과 우파 언론의 북한 지령 운운은 윤석열 퇴진 운동, 반제국주의 평화운동, 생계비 방어 투쟁 노동자들을 소수의 음모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꼭두각시 취급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요구와 선동이 지지를 얻고 광범한 운동에서 채택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잘 표현하고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질 때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가 지지를 얻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참사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뻔뻔하게 책임 회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일부 친북 활동가들이 이런 구호들을 운동 내에서 관철시켰다손 치더라도, 그것의 채택 여부

는 국내 저항의 맥락 속에서 결정되므로 북한 개입 여부는 아예 질문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아직 혐의에 불과한 것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

국정원은 이른바 '제주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들을 구치소로부터 강제로 인치해 신문했다.

이간

운동 내에서조차 친북 활동가를 국가 탄압으로부터 방어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관련 기사: 본지 2월 18일 자 호외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 탄압을 이용해 해당 운동을 고립시키고, 서로 연대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설사 운동 내 누군가가 북한 당국 측 인사와 회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공안 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간첩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려 '북한 위협'을 과장하고 억압적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용하던 전통적 수법이다.

미중 갈등 첨예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심각하다.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서방(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편에 서는 것이 한국 지배계급에 이익이라고 보고 쟁점을 옮기고 있다.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노동조건 공격도 강화하려 한다.

이는 큰 반발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북한과의 연계 · 위협성을 부풀려 친제국주의 노선을 정당화하고, 보안법을 이용한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이런 책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피해들에 맞서는 운동들을 더욱 키우고 서로 연결시켜 지배계급의 의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임준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olidarity.org/join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
/what-we-stand-for

미국과의 대결 태세를 강화한 중국 양회

지난 3월 13일 끝난 양회(우리의 국회적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 자문 기구 역할을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의를 끈 사건은 3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만장일치의 지지나 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쥘(習家軍)'이 정부 요직을 모두 차지한 사실이 아니다. 시진핑 1인 독주 체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열린 당대회에서 예견된 바였다.

이번 양회를 집약해 보여 주는 용어는 '당강정약(黨強政弱 당은 강하고 정부는 약하다) 또는 "당의 전면적 영도"이다. 물론 중국 지배 관료가 평소에도 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라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양회는 치안 유지와 금융·첨단기술 부문 관리 권한을 국무원(한국의 행정부)에서 공산당으로 넘기기로 했다. 공산당이 산하에 내무공작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치안·안보·호적을 관리한다는 것은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단속하고, 이데올로기로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체제 저항 세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나 토지 몰수에 항의하는 농민들, 또는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차별에 맞선 소수민족 등을 가리킬 수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개편은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의 본격 충돌 및 대만 통일을 대비해 공산당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논평했다.

당강정약

첨단기술 부문의 강화는 2015년에 천명한 '중국제조2025'의 연장선 상에 있다. 시진핑은 이번 양회에서 특별히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텐센트, 바이두 등 플랫폼 기업주들이 아니라 반도체·인공지능·전기차 기업주들이 이번 양회에 참석했다.

첨단기술 분야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

는 영역이 반도체와 2차전지다. 바이든은 미국 반도체 장비들의 중국 수출 중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다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주저앉지는 않겠지만 서방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또, 바이든은 중국산 배터리의 해외 수출을 막기 위해 '인플레이 감축법'(IRA)을 만들었다. 인플레이 감축법이 인플레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바이든은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 산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유럽연합도 인플레이 감축법과 비슷한 목적으로 '핵심광물자원법'(CRMA)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은 국진민퇴, 공동부유를 평소처럼 강조했다. 양회의 한 회의에서 그는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를 이끈다"(先富帶後富)면서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촉구했다. "국유기업이든 민간기업

이든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다.

시진핑이 이번 양회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이끄는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및 억압으로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며 이례적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양회 개최 직전에 있었던 '정찰풍선' 소동이나 최근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한 시진핑의 대응이었다.

또, 시진핑은 폐막 연설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하며 "외부세력의 간섭과 분리주의를 반대한다"고 말해,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번 양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점점 치열해지는 미국과의 경쟁에 맞춰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 내부를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을 추진하는 결의대회였다고 할 만하다.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내부 통제 강화 3월 7일 열린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 16면에서 이어짐

노동 개악에 사회적 대화의 이름으로 한국노총의 지지를 이용할 수도 있었던 전임 정부들과 달리 윤석열은 그럴질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노동운동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추켜세우며 개악 추진의 파트너로 삼고자 했다.(물론 규모가 작아 실질적 이기보다는 상징적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화 개악이 워라벨(일과 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에 안성맞춤이라고 내세웠었다. 조직 노동운동의 기록권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막상 노동시간 개악안이 발표(입법예고)되자 MZ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장기휴가(바짝 쉬기)는 어불성설"이라며 개악 추진에 '청년 팔이' 말라고 일침을 놓은 것이다.

노동계급 내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를 이간질하는 알팍한 책략이 이번에 먹히지 않은 것이다.

청년들이라고 일을 더 하고 임금이 주는 것을 좋아할 리 만무하다. 지난 몇 년 사이 취업했다가 금방 퇴사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데에는 낮은 임금과 함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저녁이 있는 안정적인 삶은 청년 노동자들의 절실한 바람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규제는 청년들이 취미·여가를 누리고 정치활동에 나서는 데서도 필요한 조처다.

민주당에 기대야 하나?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회에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주 69시간제 결코 허용 않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노동시간을 규제하되 유연성을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늘리고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임금(수당)을 깎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와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은 노

동자들을 더 쥐어짜려고 혈안이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력은 이미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도 모두가 먹고 살기에 충분할 만큼 발전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된다. 그래서 경제 위기 때 한쪽에선 대규모 실업이 생기는데, 다른 쪽에선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모순이 벌어진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계급 간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온 이유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약간 물러선 듯 하지만, 노동개악 시도는 끝나지 않았다. 이를 저지하려면 노동계급 대중의 만만찮은 투쟁이 필요하다.

박설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꿈수를 부리다

윤석열 정부가 특정 시기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쳐 일하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열흘도 안 돼 한발 물러섰다.

해당 법안이 대중적 불만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은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가이드라인(주 60시간 상한 캡)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쉬자'며 개악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연초부터 박차를 가하던 서둘러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를 편들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들에 대한 서민층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미일 동맹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불만까지 강하게 제기되자, 정부는 일단 노동시간 문제에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세계노동자노조연대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윤석열의 노동시간 유연화 개악은 일을 더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려는 것이다

최대 주당 80시간

윤석열의 노동시간 개악안은 주당 52시간으로 기준 삼아서 일감이 많을 때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주말 휴일 근무까지 하면 주당 80.5시간도 가능해진다. 이를 연속 꼬박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렇게 몰아쳐 일하는 대신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몰아쳐 장시간 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잠먹고 위협에 빠

뜨린다. 윤석열이 한 발 물러서며 말한 주 60시간 노동도 만성파로 기준이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빌딩에서 나흘간 62시간 연속 근무를 하던 40대 경비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압축적 장시간 노동은 생활 리듬을 깨뜨리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대신 몰아쳐 쉴 수 있다지만, 그 시간 대부분은 극도로 축난 몸을 회복하는 데에 쓰이게 될 것이다.

정부의 개악안대로라면 임금도 더 깎이게 된다. 유연근무제는 공짜 초과

근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무 수당을 매달 30만 원씩 받는 노동자에게 개악안을 적용하면 연 평균 임금이 108만 원 삭감된다.(민주노총 법률원 조사)

정부가 당근으로 내세우는 장기휴가도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몇몇 설문 결과를 보면 전체 노동자의 30퍼센트가 연차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일수록 더 그렇다. 사용자들의 눈치 때문이다.

요컨대, 압축적 장시간 유연 노동은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시간의 선택권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통하지 않은 "청년 팔이"

역대 보수 정부들은 전통적으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을, 18대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주요 지역지부들이) 박근혜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문재인, 이재명 후보를 연달아 공식 지지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다.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총 490여 개 콘텐츠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일시 3월 22일(수) 오후 8시
발제 김승주 <노동자 연대> 기자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322-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